

“호남 발전 위한 국가 균형발전 핵심은 대규모 투자”

“군공항 문제, 단순 이전 아닌 큰 그림 필요”



이민원 균형발전연구원장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역사적 ‘한(恨)’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책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행동하고, 요구해야 한다. ‘계속 호남을 홀대하면 우리도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지역에서 운동본부만 만들거나, 대안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중앙정부는 호남을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은 듯 하다.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에 대해왔다. 무언가를 내놓기만 하라는 식인데, 대통령의 테이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민원처럼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호남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은 ‘빅샷’이 필요하다.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와 비전이 따라야 한다. 군공항 이전도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그 부지에 어떤 국가적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 광주는 AI, 전남은 신재생에너지라는 큰 비전이 있다. 그렇다면 군공항 이전 부지에도 국가단지 등 큰 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처럼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대규모 계획이 필요하다.

“중기 납품단가 연동제·중대재해법 개선 시급”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인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히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로 보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해주는 제도로, 불공정한 거래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단순 처벌식 규제보다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및 교통망 확충 등 호남 특화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민 존중·배려 위한 농업정책 재정비를”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모든 정부의 정책에 국토 균형 발전이 포함되길 바란다.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변하지 않고 지지해 온 호남에 빛진 마음, 감사한 마음을 우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외닿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국토 균형 발전 철학이 깔려 있어야 한다. 지방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것이다. 산단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차등지급하는 것처럼 호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 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줄이고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길 바란다. 호남은 넓은 평야지대를 가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지역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다. 정부가 식량 주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농민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AI나 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업 생산 기반은 고령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1차산업 종사자인 농민들을 존중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농업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균형발전, 지방 경쟁력·자립기반 지원 필수”



이정락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본다. 전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에너지 고속도로 등 에너지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광주는 AI 집적단지 등 핵심 분야에서 정부와의 교감이나 가시적인 로드맵이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다. 광주 민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지자체 간 합의 부재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합의를 못 하면 중앙정부가 TF를 구성해 직접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지방정부의 무능과 정치적 섣불리가 드러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한다면 단순히 지역에 무언가를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과 자립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주·전남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의지, 지역 내부의 실질적 합의,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세제 혜택 강화”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호남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충은 심각하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지역적 한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겹쳐 있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금융 접근성이 부족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저금리 대출과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아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마케팅 교육, 물류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건 각종 행정 절차의 간소화다.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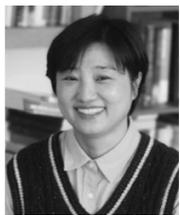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지원사업 확대해야”



장지석 대학생

예향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광주·전남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 증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현재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시설은 광주의 문화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엔날레와 광주를 상징하기도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으며 전남 지역에는 나주시의 문화예술회관과 진도의 옥주골 창작소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충분히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돼 있지만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시설, 홍보, 인식등 다방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상황이다. 당장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보더라도 더 많은 문화 작품을 즐기고 경험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로 나아가 문화 예술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매우 많지만 광주전남의 지원이 부족해 결국 꿈을 위해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취업 문제 뿐만 아닌 지역 균형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더 확대 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 영화 활성화로 문화 경쟁력 강화해야”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문화예술은 산업이 아니다. 문화예술을 산업의 관점으로만 보서는 안 된다. 풀뿌리 문화의 자생력을 높여야만 문화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영화 문화 활성화를 위한 뿌리는 지역영화이다. 지역영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술영화 전용관인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 그리고 지역영화제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작고 다양한 영화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영화인들이 관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지역에서부터 확대되어야 한다. 광주는 인권과 문화의 도시라는 상징성과 수도가 아닌 로컬로서 서구와 아시아, 아시아와 한국,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다. 광주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 광주에서 아시아 여성영화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소수자성,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저항하는 시민의 역사와 시민사회 등을 함께 주목한다는 의미이다. 광주아시아여성영화제에 대한 지원은 지역영화 활성화를 넘어 문화경쟁력 강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한우법에 농가규모별 맞춤 지원책 담아야”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한우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특별법에 대해 농가 규모별 맞춤형 지원책이 편성되어야 한다. 한우법은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수입확대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발의됐으며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 5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마저 행사하면서 제정이 무산됐다. 한우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정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경영 안정 자금 및 장려금 지급,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기업 참여 시 농가 협력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전국한우협회는 축산 현장에 적합한 지원책들이 법안에 담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8·9월 농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 요구안을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제정된 만큼 한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주길 바란다.

“대기업 비인기 체육종목 투자 유인책 절실”



배원호 광주시레슬링협회장

균형 잡힌 체육 정책으로 비인기 종목의 외면하지 않는 제도적 유인책이 절실하다. 엘리트 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체육 쪽에 정부의 관심과 비중이 커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작 메달과 직결되는 엘리트 체육이나 레슬링과 같은 비인기 종목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 결국 국가적 성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삼성 등 대기업이 직접 체육계에 투자했던 사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이 비인기 종목에도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궁, 야구, 축구처럼 기업 스스로 투자에 나서는 인기 종목과 달리, 레슬링·역도 등은 별도의 유인 없이 민간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시스템 역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에도 균형 있게 예산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국가 체육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